

국회로 들어갈 때가 아니다

촛불과 파업은 더 커져야 한다

촛불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자세한 이후 일정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웹사이트(<http://www.antimadcow.org>)를 보십시오.

서울에만 70만 명, 전국에서 1백만 명이 모인 6월 10일은 이번 촛불 항쟁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심지어 해외 9개국 18개 도시에서도 촛불이 켜졌다.

6월 10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들을 모두 ‘명박산성’(컨테이너 장벽)으로 막아 놓은 이명박은 그야말로 촛불의 바다에 포위된 ‘독 안에 든 쥐’처럼 보였다. 한국 사회의 심장부에 등장한 ‘명박산성’은 정권의 존폐를 위협하는 촛불 바다의 위력과 겁에 질린 정권의 처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사실 경비, 철제 삼각바리케이드, 쇠못이 박힌 4중 장애물까지 설치해 놓은 <조선일보> 본사의 모습도 겁먹은 지배자들의 처지를 보여 준다.

쥐새끼

3개월 전만 해도 이명박의 별명은 ‘불도저’였고 조중동문은 기고만장해 있었다. 저돌적인 우파 정부의 등장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돼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은 ‘쥐새끼’라고 조롱받고 있다. 평범한 서민·노동자들이

무릎 꿇고 있을 때, 이명박은 강력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무릎을 펴고 일어서자 진정 힘 있고 강력한 것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온갖 야비한 꼼수에 도가 튼 이명박은 6월 10일 촛불 반대 시위에 한나라당 당원들과 우익 지지자들을 버스까지 대절해 불러 모았지만 고작 5천 명에 그쳤다. 1백만 명 대 5천 명이라는 극명한 대비는 이명박의 초라한 처지만 드러냈다.

이명박은 또, ‘명박산성’에 화재 위험이 큰 그리스를 바르고, 정운천을 촛불 바다 속에 던져넣

으며 궁지에서 벗어날 ‘비극’을 바랐다. 화재·폭행 사고 등이 일어나면 그것을 빌미로 촛불을 비난하고 군화발로 짓밟을 속셈이었을 것이다.

이명박은 계엄 전 단계라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해 전국의 모든 전·의경 4만여 명을 동원했지만, 1백만 개의 촛불 앞에서는 바람 앞의 등불이었을 뿐이다. 현직 경찰서 과장이 경찰의 촛불 대응을 공개 비판할 정도로 억압 기구 내부의 균열도 감지되고 있다.

» 3면으로 이어짐

6·10 이후
반이명박 투쟁의 과제

3면



체제의 폭력에 맞서는
효과적 방법

7, 8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운동에 정치단체가
필요한 이유

6~7면



화물연대 파업이 나아갈 길

12면

2MB의 미친 비정규직 정책

4면



오바마와 미국 제국주의

5면



홍종호 교수의 대운하 비판

9면

촛불 현장에서 온 독자편지들
10~11면

<맞불> 웹사이트를
<http://www.counterfire.or.kr>
방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하도 밥 먹자고 졸라서 나가 보니 ‘오빠, 나 이번에 [장관] 안 시켜 주면 물어버릴 거야~잉. 알았자~잉’ 이래요.”

— 한나라당 정두언이 실토한
강부자 내각의 인선 과정

“담배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촛불시위는
어째서 없는가.”

— 국우익 이동복의 불만

“경찰, 검찰, 기무사, 국정원을 동원해
빨갱이들을 잡아들이라.”

— 금란교회 목사 김홍도

“좌파의 선동에 놀아난 바보, 천치, 정신
이상자들이 모여 부끄러운줄을 아는지
밤에만 설치는 족속들 … 촛불집회에 아
이를 데려오는 이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어린이 영혼 추행범”

— 국우익 조갑제의 독설

“아이, 서울경찰청장 없어? 저 사람들
포송줄로 묶어, 거꾸로 매달아. 빨갱이들
이야!”

— 6월 10일 시청 광장에 나온
우익 예비역 장성

“미국은 공권력에 대응하면 경찰이 권총
을 쏜다. … 위수령을 발동해 군대를 동
원, 촛불집회를 진압해야 한다.”

— 국우익인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

“물대포가 정말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
럼 비데로 한 번 써 보라”

— 닭장차에 적힌 낙서

“이명박을 밀어주자 홀라홀라~ 이명박
을 밀어주자 홀라홀라~ 동아일보 옥상
에서.”

— 새롭게 등장한 홀라송

6월 10일, 쇠고기 재협상과 이명박 퇴진을 요구하며 1백만 촛불이 전국과 해외에서 이글거렸다. 서울 70만 명, 광주 10만 명, 부산 5만 명 등 전국이 촛불 바다였고, 그 파도는 9개국 18개 도시에도 건너갔다. 6·10 시위는 이명박 반대 운동의 중요한 분수령이 됐다.

〈맞붙〉기자 최미진이 시위 참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봤다.

이명박 정권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오늘도 저 컨테이너 보세요. 제가 회사에서 후배들에게도 얘기해 함께 참가했는데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시위는 계속돼야 한다고 봐요. 호지부지되면 수구꼴통들이 냄비근성이라고 할 것 같아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요. 5천만 인구를 평균적으로 보호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사유화한다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거죠.

직장인 황은식

장관들 몇 명 바꾸는 수준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왔는데, 저희는 교사라 파업권은 없지만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파업 찬성표를 던지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박준석

오늘 총학생회가 주도해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출발했어요. 학생들이 개인주의화됐다고 말하지만, 민중의 파도에 있으니까 학생들도 느낀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선배들이 했



던 동맹휴업과 같은 전통도 조금씩 복원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상명대학교 한 학생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쓰는 것은 안돼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하야입니다! 국민들의 핵심 요구가 성취될 때까지는 절대 시위대가 물러서서는 안돼요.

성균관대 학생 조효은

오늘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시위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고등학생 후배들이 먼저 참가해 촛불을 들어 줬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은 지금 쥐구멍만 찾고 있는데 촛불을 들게 한 공교육 문제부터 해결해야 쥐구멍이 조금 커질 것 같아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조중동 같은

이상한 언론에 휘말리지 말고 흔들림없이 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세대학교 학생 김영균

청계천에서 장사하는데 처음에는 시위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속상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대사관 앞에 전경들이 완전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스무살 때 늘 보던 장면이었어요. 그 때 그 악몽이 다시 떠오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이 사람을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었어요.

40세 양미숙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보자고 해서 왔어요. 먹을 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국민

의 소리조차 거부하고 컨테이너까지 치면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살사댄스 동호회 회원

몸은 비폭력이지만 입은 폭력을 하겠습니다. 이명박은 개새끼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민주화운동을 해서 전두환 정권을 물리친 21주년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촛불 들고 열심히 합니다.

분당에 사는 고등학생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는 다른 곳에는 없고, 이곳에서 전경 오빠들과 서바이벌 달리기 하면서 배웠습니다. 이제 나도 자랑스럽게 “민주화의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고3들이~ 나와 함께하자!

한 고3 여학생

5만 개의 촛불이 부산 서면을 뒤덮다

6월 10일 5만 개의 촛불이 부산 서면 태화백화점 앞 8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다. 참가자들은 일체감을 느끼며 자신들의 힘에 환호했다.

우리는 역사적 순간에 함께하고 있었다. 촛불집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유인물을 나눠 줬고, 집회 장소는 정치적 주장과 요구를 담은 팸말·선전물로 가득찼다.

대학생들은 시험기간인데도 총학생회 깃발을 들고 모였고,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참가한 가족도 눈에 띄었다. 특히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회사 동료들과 함께 참가했다.

사회자가 민주노총 노동자 3천여 명이 범내골과 부전동 양쪽에서 행진해 온다며 “대로로 나가자”고

호소하자, 순식간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면 대로를 가득 메웠다. 서면 일대는 글자 그대로 해방구가 됐다.

곳곳에서 젊은 밴드와 힙합 그룹이 거리 공연을 벌였고 참가자들은 도로에 그림을 그리거나 초코파이를 돌리기도 했다.

해방구

자유발언에서는 대운하를 비판하고 공기업 사유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이 대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별호응을 받지 못했다. 반면 노동자들이 나설 것을 호소하는 발언은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

그런데 부산시국회의가 실질적으로 이 운동을 조직하고 이끌면서도 공식적·민주적 대표체가 되는

것을 회피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이런 태도는 이 날 행진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자는 행진 방향, 전술 등을 공지하지 않고, 그냥 서면 로터리로 가자고 해 혼란이 초래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면 로터리를 점거했지만, 대열을 이끄는 방송차나 지도부가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했다.

한쪽에서는 버스를 막았고 몇몇은 버스를 통행시켜야 한다고 했다. 방송차로 대열 지도를 시도할 무렵에는 이미 다수의 참가자들이 빠진 상태였다.

부산시국회의는 대중의 분노를 집중시킬 운동의 대표체로 나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분노를 최대한 집중시키기 위해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행동 통일이 필요하다.

박수원

전주에서도 타오른 촛불

‘6·10 전북도민 1만 촛불대행진’은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대중의 분노와 열망에 비해 오히려 소박한 목표였음을 보여 줬다. 다른 시·군을 빼고도 전주에만 1만 5천여 명이 모였다.

전주의 관통로 사거리와 팔달로 오거리까지 전차선 도로와 인도가 성난 반정부 대오로 가득찼다. 사람들은 1987년 6월 항쟁을 떠올리며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

7시 본대회에 앞서 6시부터 전주 시내 곳곳은 사전 부문대회를 연 노동자, 농민, 여성, 대학생, 청소년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에 2천 대오가 모여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현장

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하고 대회장까지 행진했다.

전주교대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하고 일부는 역사적인 투쟁의 중심인 서울로, 일부는 전주 집회에 참가했다. 군은 각오로 등록금 투쟁을 이어 온 우석대학생들도 비록 동맹휴업을 성사시키진 못했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많은 수를 조직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학교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고등학생들도 교복을 입은 채 대거 참가했다.

1만여 대오는 6월 항쟁을 재현하며 당당히 경기장 사거리까지 시내 한가운대를 1킬로미터 이상 행진했다.

이병무

이명박 퇴진을 향해 힘을 결집하자

» 1면에서 이어짐

물이 끓다가 1백 도를 넘으면 액체에서 기체로 질적인 전환을 하듯이, 촛불 항쟁은 6월 10일 1백만 명이 모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명박 정부 퇴진 투쟁으로 성큼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명박의 귀가 막힌 이유

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무려 1백만 명이 거리로 나서 정권 퇴진을 외칠 정도인데도 왜 이명박은 부시 정부와 한 목소리로 한사코 재협상 조차 거부하고 있는가?

이명박이 이처럼 귀를 시멘트로 막아 놓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그가 진정으로 대변하는 게 평범한 국민이 아니라 소수 재벌과 강부자들이기 때문이다.

기업, 언론, 대학 등을 소유·지배하고 정부, 경찰, 국회, 법원 등을 ‘배후 조종’하는 이들에게 이명박은 결코 귀가 막힌 사람이 아니며 너무나 소통이 잘 되는 ‘머슴’이다.

어차피 고급 한우를 먹으면 되는 대기업 소유주와 최고경영자들(경제5단체장이 대변하는)은 광우병 위험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원한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통해 임금재의 가치(노동력 재생산 비용)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재벌·강부자의 ‘머슴’

하지만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를 놓고 1999년 10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2003년 5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같은 해 12월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무역 분쟁과 비슷한 무역 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이 이명박이 우려하는 소위 “정부의 신인도[신뢰성] 실추”가 뜻하는 바다.

그래서 투쟁 수위가 어지간해서는 이명박은 물러서지 않으려 하며 고작 ‘자율 규제’와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내각 교체를 내놓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총리 기용’을 양보라고 내놓는 황당한(박근혜가 총리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제쳐두고라도) 짓도 하고 있다.

이명박의 고유가 대책도 정유 재벌들의 주머니는 전혀 건들지 않으면서 서민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뺀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어 주는 것에 불과했다. 이어지는 통신비·교육비 대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느 정부든 정치 위기가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져 완전히 결집할 수 없어질 때까지도 내놓지 못할 양보 조처는 없다.

그러므로 재협상을 얻어내려면 지금보다도 투쟁의 수위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20만 명이 참가한 시위에서 정권 퇴진 구호가 나와 권력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1백만 시위에서 이 문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제기됐다.



정권 퇴진과 “의제 확장”

따라서 ‘6월 10일 이후는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답은 이명박 퇴진과 “의제 확장”(요구 확대)이어야 한다. 이미 “이명박 퇴진”은 촛불 바다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호이고 촛불의 요구는 쇠고기 문제를 넘어 확대됐다.

광우병으로 불이 붙어서, 이명박의 모든 미친 정책들에 대한 반대로 번지다가, 이 모든 것의 배후인 이명박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대운하, 민영화, 경쟁 교육 등에 대한 반대를 공식 요구로 채택하고, “6월 20일까지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11일 밤 9시 MBC TV 뉴스) 것은 매우 반갑다.

물론 범계급적인 현 촛불 운동 참가자들 가운데는 단지 쇠고기 문제에만 이해관계가 걸린 세력들이 있다. 예컨대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해 “[정권 퇴진이라는] 엉뚱한 쪽으로 불이 붙고 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의회주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권 퇴진 요구를 두려워하는 세력도 있다. 민주

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리로 한나라당과 타협해 국회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얼토당토않게도 촛불 운동 참가자 일각에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식의 지지를 받고 있는 노무현은 “청와대로 행진하거나 정권 퇴진을 요구해선 안 된다”며 운동이 체제 내에 머물 것을 촉구했다.

최장집 교수도 “거리의 정치는 오늘 이선에서 그쳤으면 좋겠다”며 “제도권 내 정당이나 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류근일은 “헌정 질서도 존중하고 군중의 합당한 요구도 수용할 수 있는 차선책을 피차 찾아야 한다”며 이런 개입을 반겼다.

제도권

촛불 지지 주류 언론의 자유주의적 본질도 드러나고 있다. 며칠 전 밤 9시 MBC TV 뉴스 논평과 11일치 <경향신문> 1면 주요 기사 논조는 “제도권 수렴”을 촉구하는 것이다. 국회 내에서 이런 갈등을 조정·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헌

정질서’는 국민을 등쳐먹는 이명박 정부의 사회적 기반인 재벌·강부자 집단을 위한 질서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인 국회가 쇠고기 문제를 넘어선 문제 해결의 통로가 될 수 없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경쟁 교육, 민영화, 한미FTA 등은 바로 노무현과 민주당이 추진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중의 ‘보수화’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 운동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결여하고 있다.

이명박 퇴진을 둘러싼 운동 내 강온파가 본격적으로 대립하면 이 틈새를 이용해 이명박은 강경파를 고립시켜 탄압하며 통제력을 회복하려 할 수 있다. 조갑제 는 이명박에게 “양보만 하고 공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또 밀린다”며 야당의 국회 동원을 계기로 “법질서 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코치했다.

그러나 최근에 공공노조의 공공서비스 사유화 반대, 대운하 반대, 유가 인상 반대 등의 요구는 물론 그 밖의 다양한 요구와 쟁점이 제기되면서 운동은 더 확대됐다. 단지 쇠고기 문제만으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운동 지속에 의욕을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촛불 운동의 시초부터 <맛불>은 운동 근저의 다양한 불만과 요구가 쇠고기 쟁점 부각과 맞물려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운동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단지 쇠고기 문제를 넘어 요구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운동의 단결을 보증하는 것이고, 확대된 요구의 성취는 이명박 정부와는 성격이 다른 진정한 진보적 정권이 들어섬으로써만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이명박의 미친 정책들에 반대하는 광범한 사회 세력들의 요구와 힘 — 특히 조직 노동자들의 힘 — 을, 미친 정책들의 ‘배후’인 이명박 퇴진을 향해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운동을 전진시킬 것인가

하나의 방향으로 힘을 집중시키는 리더십의 필요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도 있다. ‘확성기, 방승차, 깃발은 필요 없다’는 주장처럼 말이다. 이런 주장은 운동 내의 노무현·문국현 세력을 겨냥하지 않고 좌파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위선적이고 그 성격이 친자본주의적 개혁주의이다.

이명박이 전국의 모든 경찰 병력을 총집결시켜 무자비한 폭력 사용도 서슴지 않으며 운동을 겨냥하고 있는 지금, 재벌·강부자 권력이 온갖 미친 정책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지금, 신자유주의로 고통받는 사회세력들의 힘을 정권 퇴진으로 결집시켜 운

동을 전진시키는 리더십은 절실하다.

그것은 민주적이고 쌍방향적인 리더십이어야 하고 우리의 피해와 힘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동을 전진시키는 리더십이어야 한다.

그 리더십은 지금, 재벌·강부자들의 권력 기반인 생산과 이윤 자체에 타격을 가할 조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고무·확산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대중 행동의 힘을 바탕으로 위력적인 거리 행진이 계속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이 그토록 두려워했고, 지금 이명박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

“노무현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내달렸지만, 이명박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역주행한다”는 유행어는, 이명박이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어떤 작태를 보일지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이명박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랜드 사태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도 있다고 말한 유일한 후보였다. 그는 공공연하게 “세계 어느 선진국도 우리와 비교해 비정규직의 수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비정규직을 써도 괜찮다”, “수지가 안 맞으면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해 왔다.

당선 직후에는 대량 해고 당해 고공농성중인 (그래서 지금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GM대우 부평공장을 찾아가 보란 듯이 ‘노사화합과 무파업’을 찬양하기도 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도 폭력 침탈했다. 그는 식칼테러를 밥먹듯 하는 현대그룹 출신답게 경찰과 용역 강패들이 “노동자들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발로 차”는 것을 사주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처절하게 계속되고 있다.

1천 일 넘게 싸우고 있는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 투쟁 8백 일을 넘어서 KTIX 승무원들과 3백 일을 넘긴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 코스콤, GM대우 등 수많은 비정규직 투사들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에 맞서 1천 일 넘게 싸우면서, 또다시 구로디지털단지 CCTV탑 위에 올랐다. 노동자들은 “철탑에 올라 목숨을 걸고 …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1천 일 넘게 싸우고 있는 기륭전자 노동자 박행란 씨 - 2MB 비정규직 정책 비판 기자회견 이후 갑자기 연행 당했다

며 “사용회사는 권리만 있고 일하는 노동자는 의무만 있는 노예노동인 파견노동, 그것도 불법파견이 허용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인가” 하고 절규했다.

절규

지난 6월 5일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박행란 기륭전자 노조원을 연행하는 것으로 이런 절규에 대답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지적처럼 이명박은 “최근 중국 방문길에 최동렬 기륭전자 회장과 동행”하더니 “명백한 보복성 연행”까지 자행한 것이다.

이렇듯 이명박은 노동자들에게는 가혹

한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사장들에게는 노동법 개악과 규제완화라는 한 다발의 선물을 안겨주려 한다.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4월 30일, 외국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하고 친기업적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또, 기간제노동자의 고용 기간 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제도 네거티브제(특정 업종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비정규직 파견을 허용하는 것)로 변경하는 것을 제시했다.

게다가 다가오는 7월이면, 비정규직 악법이 1백 인 이상 3백 인 미만 작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해보다 무

려 7배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와 외주화로 고통받게 된다.

그러나 천하무적으로만 보였던 이명박이 최근 광우병 촛불시위로 좌초 위기에 빠져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듯이, 이명박의 노동법 개악 시도도 뜻대로만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명박을 백기투항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투사들과 전체 노동자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리 항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 속에서 노동자들을 열악한 처지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광우병, 비정규직을 폐지하기 위해 함께 나서는 수많은 동조자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정숙

대중파업 - 이명박 반대 투쟁 승리의 열쇠

촛불시위가 이명박 정부를 더 쪼렷매게 하려면 공공 업무와 기업 영업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을까?

역사는 “그럴 힘이 있다”고 답한다. 정치투쟁은 경제투쟁을 한껏 고무해 노동자들을 강렬한 자석처럼 투쟁에 빨려 들게 하곤 했다. 그 경제투쟁이 이번에는 더 큰 정치투쟁의 비옥한 토양이 된다.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대중파업은 일찍이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대중파업》에서 말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상호 상승효과를 분명하게 입증했다. 6월 항쟁 당시 거리 시위에서 자신감을 얻은 한국 노동자들은 군사 독재 정부가 물러서는 모습을 봤다. 노동자들은 당연히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작업장 독재는 왜 그대로지?’

6·29 선언 일주일 뒤 울산의 현대엔진 노동자 1백여 명이 기습적으로 노조를 결성했다. 그리고 7월 중순의 울산 노동자 투쟁은 중공업 중심지 창원·마산으로, 8월 중순에는 경공업 지대인 경인 지역과 전라도로 번졌다. 지역과 산업, 사업체 규모를 넘어서 거대한 반란이었다.

민주화 투쟁의 뼈기를 박은 1987년 노동자 대중파업

언뜻 보기에 ‘보수적’이고 ‘실리’밖에 모르는 듯하던 평범한 노동자들의 파업 열풍은 대학 총장직선제·판금 도서 해금·언론악법 폐지 등 정치민주화의 요구를 순식간에 쟁취했다. 무엇보다 이런 투쟁 덕분에 한국사회는 1960년 4월 혁명과 1980년 광주항쟁이 겪은 반동을 피할 수 있었다.

정확히 40년 전 세계를 뒤흔든 1968년 반란 때에도 그랬다. 프랑스에서 드골의 권위적 통치와 폭력 경찰에 반대해 새벽까지 파리 도심을 돌며 연일 행진을 한 학생들의 투쟁은 르노 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졌고 순식간에 항공산업, 철도, 버스,

우편, 금속, 조선소, 보험사, 대형상가, 은행, 인쇄업 등으로 번져 유럽 역사상 최대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경제투쟁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하고 정치투쟁은 국회의원들과 정당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고정관념이다. 일상적인 시기를 벗어나 대중행동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는 전기충격이 오듯 오랫동안 참고 눌러 온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깨어난다.

한 걸음

룩셈부르크가 관찰했듯이 대중파업은 무엇보다도 노동자 그 자신을 변화시킨다. 그 이전의 운동가들이 수년 동안 이룩할 수 없었던 속도와 범위로 그렇게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자들은 놀랄 만큼 신속하게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 내고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조직화한다. 1987년 7~9월 대중파업 때 순식간에 3천여 개가 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1936년 프랑스 대중파업 당시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이 1백만 명에서 순식간에 5백만 명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하루 총파업이 며칠이라도 확

대될라치면 노동자들은 다양한 사회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곤 한다. 예컨대, 1919년 미국 시애틀에서는 파업위원회의 허락이 있어야만 트럭들이 식료품을 운송할 수 있었다. 이런 일들은 수많은 대중파업의 역사에서 벌어졌다. 1917년 러시아의 혁명적 대중파업, 1956년 헝가리, 1936년과 1968년 프랑스, 1978년 이란, 1980년 폴란드에서…

노동자들은 지금이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을 무력화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느끼고 있다. 대중파업 역사를 보면 친기업 정부가 세운 반노동자적 조치들은 파업 동안 무력화되곤 했다. 40년 전 프랑스 대중파업 당시 프랑스노동조합민주연합(CFDT)의 한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파업 전 5일 동안 경고기간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무시하고 파업에 들어간 교사들이 해직되지 않았다. 우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잘 싸우면 … 위험 부담도 매우 작다는 것이다.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됐다.”

이명박의 불도저 정책에 두려움을 느꼈던 노동자들은 그 불도저가 작동 정지될 수도 있음을 어렵잖이나마 느끼며 용기를 얻고 있다.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대중파업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김어진

오바마가 미국 제국주의를 끝낼 수 있을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머나먼 은하계의 제국 하나가 쇠퇴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재앙으로 끝난 군사적 모험과 신흥 열강들의 성장 때문에 제국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게다가 황제 자신은 시골뜨기 바보라고 경멸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황제의 후계자를 선정해야 할 때가 왔다. 말 잘하고 활기차고 비교적 젊은 남성 — 제국이 저지른 가장 큰 역사적 불의(不義)의 피해자 집단 출신일 뿐 아니라 아버지는 외국인이고 자신은 어린 시절의 일부를 또 다른 외국에서 보냈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은 인물 — 을 황제로 선택하는 것보다 제국의 부흥을 과시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아마 이것은 버락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너무 냉소적으로 보는 견해일 듯하다. 그가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전에서 승리한 원동력은 조지 W 부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엄청난 혐오, 노예제와 인종차별이 미국 사회에 가한 고통을 이제는 치유해야 한다는 염원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의 진정한 권력은 해외에서 드러난다. 1961년에 [쿠바 피그 만 침공이 실패한 뒤]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리처드 닉슨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다뤄야 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외교 문제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국과 쿠바의 대결 같은 — 캘리니코스] 문제를 놔두고, 최저임금이 1.15달러가 되든 1.25달러가 되든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대선후보의 외교 정책은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공화당 후보인 존 매케인은 이라크 주둔 미군이 앞으로도 “아마 1백 년”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오바마가 힐러리 로덤 클린턴을 이길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2003년에 이라크 침략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16개월 안에 이라크 주둔 미군 전투 여단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해관계

그러나 오바마가 백악관에 입성해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판단하려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실제로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봐야 한다. 미국 대선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다. 힐러리에 대한 오바마의 승리는 오바마가 선거자금을 더 많이 모은 것에서 결판났다. 미국 대선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자본주의의 국제적 이해관계를 가장 잘 보호할 정치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다.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1980년 1월에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훨씬 전부터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목표는 군사적·정치적으로 중동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유가가 폭등하는 지금 이 목표는 훨씬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지난주 토요일(6월 7일) 〈워싱턴 포스트〉가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주에 오바마가 중동 정책에 대한 주요 연설로 대통령 선거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가 개괄한 핵심 전략은 많은 점에서 부시 정부의 전략 — 다시 말해 존 매케인의 … 전략 — 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오바마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주요 로비 단체인 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 모임에서 연설했다. 그의 목적은 두 가지였던 듯하다. 첫째는 그를 의심하는 청중들에게 자신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이 약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이었다.

오바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는 신성불가침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예루살렘

“오바마가 … 대통령 선거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가 개괄한 핵심 전략은 많은 점에서 부시 정부의 전략 … 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 〈워싱턴 포스트〉

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분할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 때 하마스의 선거 출마에 반대했다고도 말했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3백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로, 오바마는 이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그동안 오바마는 이란의 이슬람공화국 정권과 협상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부시와 매케인한테서 ‘유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오바마의 입장이 딱히 급진적인 것은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부시 1세 정부에서 고위 관리를 지낸 제임스 베이커가 주도한 이라크스터디 그룹이 2006년 12월에 제출한 보고서도 이라크 수령에서 빠져나오는 방안으로 이란과 협상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매케인에게 옆구리를 찔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AIPAC 모임에서 “제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얻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여기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와 궁극적으로는 무력 사용으로 뒷받침되는 “공격적이고 원칙적인 외교”도 포함된다.

“저는 우리 나라의 안보와 우리 동맹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어조 변화는 단지 선거에서 매케인을 물리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미군 증파는 이라크에 평화나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했지만, 미국이 장기적인 이라크 정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주기는 했다.

지난주에 〈소셜리스트 워커〉와 〈인디펜던트〉에 폭로된 미국과 이라크의 ‘전략적 동맹’ 합의문 초안은 미국의 이라크 정책이 어떤 것인지 보여 준다. 이라크에 영구 주둔할 미군 기지들을 건설하고, 미국 국방부가 종속국(이라크) 정부의 허가 없이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등이 미국의 정책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그런 정책을 비난했다. 그럼에도 아주 확실한 것은, 〈워싱턴 포스트〉가 오바마의 “중동 정책”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부른 것을 채워넣기 위해 그가 이라크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희석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대통령 오바마가 중동 정책에서 대동소이한 정책을 추구할 거라면 과연 그가 미국 제국 자체를 변화시킬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신성불가침

냉전 종식 뒤에 전문가들은 ‘일극 체제’ — 미국의 압도적인 세계 패권 — 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진 미국을 보면 오히려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했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의 경제 성장이나 영국과 미국의 금융 투기로 촉발된 신용 경색을 보면 그런 생각은 더 강해진다.

오바마는 부시로 상징되는 오만한 권력과는 다른 미국의 얼굴을 세계 지배계급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 협상하고 타협할 준비가 돼 있는 미국, 특히 기후변화 문제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는 미국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모습을 말이다.

그러나 더 개방적인 이런 자세도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것이다. 오바마는 실제로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원하고 있다. 그는 매력적인 흑인 황제가 되겠지만, 여전히 대규모 군대를 뒤에 거느리고 있을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재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이 한국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 이명박을 만나러 온다.

부시!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부시 방한 항의 집회

일시: 7월 5일(토) 시간·장소: 추후 공지 주최: 한미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좋아하는 반면, 정당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듯하다. 여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세계의 주요 정당들이 모두 부패했다는 것이다.

좌파는 좌파대로 정당을 의심하거나 정당에 적대적인 이유가 있다. 소련·중국·북한 등 스탈린주의의 경험 때문이다. 이 국가들이 모두 일당독재 체제이므로 만약 좌파가 정당을 만든다면 결국 새로운 스탈린주의의 괴물을 창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인 것이다.

때때로 이런 생각은 체제적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기도 했다. 자율주의에서 그런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의 이론가 중 하나인 토니 네그리는 정당이라는 조직 방식은 끝났다고 확신한다.

또 다른 자율주의 이론가인 존 홀러웨이는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정당은 권력 장악을 추구하는 잘못된 전략의 일부로, 권력을 잡으려 한다면 결국 스탈린주의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선택

정당은, 심지어 혁명적 정당도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이다.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자기해방이다. 칼 맑스는 노동계급이 스스로 해방해야 하며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자기해방 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날 대안세계화 운동[시장지상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의 경험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대안세계화 운동이 등장하고 초기에 유력했던 정서는 도취감이었다. 이런 도취감은 이 운동이 노동계급의 오랜 세계적 패배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매우 다양한 배경과 관심을 가진 활동가들 사이에 강력한 연대감이 존재했다. 정당에 대한 전반적인 의심도 존재했다. 많은 나이든 활동가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투쟁을 경험한 노련한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이 속한 정치 단체에 실망했고, 따라서 정당에 매우 적대적이었다. 다른 활동가들은 주로 1980~90년대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NGO를 통해 조직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도취감은 사라졌고, 대안세계화 운동은 어려운 정치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분열했다.

첫 번째 문제는 ‘국가 폭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다. 2001년 스웨덴 예테보리 [경찰의 발포로 3명이 부상] 시위와 이탈리아 제노바 G8 반대 시위 [경찰이 시위대를 살해] 당시 국가는 엄청난 폭력을 자행했다. 아랍(프랑스 등 서유럽 나라들에서 활동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 단체) 같은 운동 내 온건파들은 이런 폭력 때문에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동의 다수는 그런 제안을 거부했다.

두 번째 문제는 ‘9·11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다. 부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했다. 그 전까지 대안세계화 운동은 주로 무역과 외채 같은 경제 점점을 가지고 운동을 벌여 왔다. 이제 ‘대안세계화 운동은 전쟁에도 반대해야 할까? 대안세계화 운동은 동시에 반전 운동이 되어 할까?’



촛불의 활력과 힘을 키우려면 일관된 정치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 – 좌파 정치세력 – 의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변혁 정치 단체와 사회운동

[편집자] 이명박은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에 대해 계속 얘기한다. 김대중-노무현-문국현 등 자본가들의 포퓰리스트 정치인을 지지하는 운동 내 일부 세력도 좌파 정치세력의 개입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영국 런던대학교 킹스 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맑스주의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2006년 5월 방한했을 때 이 문제를 다룬 강연을 했다. 지면 제약상 편집이 불가피했으므로 전문을 보고 싶은 사람은 <덧붙> 웹사이트(<http://www.counterfire.org.kr>)를 보시오.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다시 한번 운동 내 온건파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팍의 지도자인 베르나르 까쌍은 미국의 B-52 폭격기가 폭격을 하든 말든 세계의 빈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히 이탈리아와 영국 활동가들은 “아니다. 둘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빈곤이 계속되는 것은 미국과 그 밖의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력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거대한 반전 시위, 특히 2003년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참가한] 2·15 시위는 그 직전 유럽사회포럼과 세계사회포럼의 대안세계화 운동에서 시작됐다.

상충하는 강령과 전략

이런 선택들을 통해 대안세계화 운동 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차이가 발생했다. 서로 다른 강령과 전략을 대변하는 일련의 경향들이 생겨난 것이다. 첫째, 프랑스 아팍이 대표하는 개혁 유입주의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단지 신자유주의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서방 자본주의 진영에 존재했던 좀더 규제된 형태의 자본주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

둘째 경향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과 프랑스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처럼, 서로 내용은 다르지만 근본적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경향이다.

셋째 경향은 네그리와 홀러웨이가 대표하는 자율주의 경향이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해 집중된 정치투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영국의 한 자율주의자는 자율주의 측의 대안을 ‘자본주의에도 불구하고 영위하는 삶’이라고 불렀다. ‘자본주의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어떻게 성취하고, 그 모습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간적이고 민주적으로 살 공간을 자본주의 체제 내 어딘가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네그리와 홀러웨이는 ‘탈주’, 즉 자본주의에서 벗어나기를 주장한다. 그들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파괴하지 않고 탈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정치적 의미

그러면, 과연 정치란 무엇일까? 레닌은 경제의 집중된 표현이 정치라고 했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함축한다.

첫째, 정치는 모두 **경제**의 집중된 표현이다. 정치를 이해하고 싶다면 정치의 깊은 곳에서 작용하고 있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존재하는 착취와 모순, 투쟁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정치는 경제의 **집중된** 표현이다. 다시 말해,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은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 영역은 경제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 논리는 국가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권력을 잡지 않고 세상을 바꾸자’는 홀러웨이의 구호를 이에 비취 평가해 보면, 이 구호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면서 단지 국가에 등을 돌리고 못 본 채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를 잊었다고 해서 국가가 우리를 잊지는 않는다. 우리가 투쟁할 때 국가는 우리를 공격한다.

따라서 세계를 바꾸고 싶지만 국가 권력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계를 바꾸는 일에 별로 진지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기존 국가를 장악하겠다는 주장이 아니다. 기존 국가들은 본래 노동자 착취의 유지에 필요한 위계적·억압적 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목적이 피억압민들의 자기해방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런 자기해방은 기존 국가를 파괴하고 노동계급 권력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대중운동을 건설할 때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필요하다. 투쟁들을 단결시키고 운동이 정치권력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 집중점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분열시키고 파편화한다. 대중투쟁이 국가 권력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혁명적 정당이 스스로 권력을 잡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맑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당이 대표하는 정치적 중심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대해 얘기했는데, 내가 혁명적 정당이 자기해방의 도구라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 의미이다. 혁명적 정당은 대중투쟁을 대신할 수 없지만 대중운동이 더 효과적이고 집중되도록 도울 수 있다.

다시 말해, 운동과 당을 대립시킬 것이 아니라, 그 둘이 함께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체제의 폭력에 맞서는 효과적 방법

최일봉

지난 6월 8일 촛불 집회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자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을 부풀려 비난했다. 경찰은 “폭력”이라는 주문만 외우면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짓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군다.

그러나 그동안 촛불집회는 비폭력적 항의였다. 폭력을 행한 건 경찰이었지, 집회 참가자가 아니었다.

사용자·경찰·법원에 의해 부당하고 억울한 차별을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촛불 집회 참가자의 일부이다)는 이윤 체제와 국가 기관의 폭력을 넘더러 나게 나날이 겪는데, 이에 견주면 6월 8일 집회 현장에서 일어난 폭력은 실로 새 발의 피다.

집회·시위·파업을 탄압하기 위해 무지막지한 경찰 폭력을 부추기고, 급진적 정견을 이유로 비폭력적 언론·출판·결사를 보안법으로 다스리고, 첨단 대량살상무기 구매를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낭비하고, 하루에도 몇 명씩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극소 규모 폭력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다.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반서민 시장 지상주의 정책들을 서민에게 강요한다. 그러한 정책들은 정경 담장차 유라창 몇 장 깨는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다. 냉혹한 시장경제 정책은 모두 부유층이 더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해, 마치 머리에 총을 쏘 죽이는 것만큼이나 확실히 빈곤층을 죽인다.

그런 일상의, 제도화된 살인을 친부유층 언론은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언론 매체와 경찰 간부들은 집회 참가자들이 그러한 제도적 폭력을 멈추라고 이명박에게 달려가는 것을 막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초의 노동계급 운동인 1830년대 영국 차타즘(인민헌장 운동)의 지도자 브론테어 오브라이언은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 부자들은 여느 때의 그들이다. 냉혹

폭력에 대한 맑스의 태도

맑스는 노동자 권력과, 강제력에 의한 자본주의 전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제 노동계급이 자신을 억압하는 지배계급들에 맞서 혁명과 내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했다. 이 점에서 그는 거의 언제나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노동계급 운동의 목표가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없는, 계급 없고 국가 없는 사회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분명했다.

개혁만이 ‘현실’적이라고 믿는 비폭력주의자들은 이 때문에 맑스주의자를 이상주의자 또는 심지어 ‘공상가’나 ‘몽상가’로 여긴다. 사회와 개인들 사이의,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터는 폭력이 영원히 불필요하게 되도록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맑스주의자의 염원은 이처럼 원칙적 비폭력주의자의 비웃음을 산다.

비폭력적 사회라는 비전을 수용하는 데서 맑스는 어떤 원칙적 비폭력주의자보다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갔다. 맑스는 폭력의 근원을 밝혀냈는 데 반해 원칙적 비폭력주의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맑스주의는 폭력의 근원을 공격한다. 단지 인간의 사상과 감정으로부터 폭력을

하고 교정 불가능한 …, 그런 적에 맞서 도덕적 힘을 얘기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다. 오직 압도적 세력에 대한 압도적 두려움만이 인류를 위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맞는 말이다. 여전히 우리는 “냉혹하고 교정 불가능한 여느 때의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압도적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소수가 쇠파이프나 각목을 휘두르는 것보다 이것이 주류 언론사 간부들과 경찰 간부들을 “압도적 두려움”에 빠뜨리는 길이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듯하기에 그들은 신경질을 부리는 것이다.

활동가들은 특정 상황에서 실제 세력관계를 고려하는 훌륭한 전술 감각의 필요성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도덕적

으로는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물리력이 더 강력한 시위 진압 경찰과 애써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

그동안 일부 반신자유주의의 시위에서 물리력의 열세에 직면해 큰 좌절감을 느끼고 때때로 그 일부가 불필요한 폭력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경찰력을 압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시도하는 것이 기껏해야 자학적인 때 이것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현명치는 못한 처사다.

이 사회에서 폭력의 주요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이고 주로 폭력을 자행하는 자는 자본주의의 국가이다. 그러나 체제의 폭력에 대한 최상의 응답은 노동계급을 최대한 결집시켜 국가가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소수와 폭력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때때로 이 과제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

근절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물질 생활의 토대로부터 폭력을 근절하고자 한다. 맑스주의는 폭력이 사회의 계급 적대에서 자양분을 얻고 있다고 여긴다.

몇천 년 동안 종교가 자비와 이웃사랑을 설교했지만, 종교는 폭력을 조금치도 감소시키지 못했다. 종교는 미국의 신보수 기독교인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양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또, 종교는 수단과 케냐에서 인종 청소를 막지 못하고 있고, 기독교인 나치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 집어넣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 밀레니엄(1천 년)이 벌써 두 번 지나갔지만, 원칙적 비폭력주의가 낳은 결과는 고작 이것이었다.

더구나 활동가들이 폭력 행동에 나섬으로써 혁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계급투쟁이 비등하고 계급 적대가 더할 나위 없이 첨예해져 결국 임계점을 넘을 때 비로소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때 노동계급이 불가피한 폭력 사용을 주저한다면 지배계급은 비할 데 없이 야만적이고 끔찍한 폭력을 피억압 계급들에게 대거,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투사들은 여차하면 노동자 대중에게 폭력 사용을 호소할 태세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미덕으로 격상시키지 않고서 말이다.

차티즘 운동 좌파의 구호를 빌면 이렇다.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필요하면 강제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아이 – ‘원칙적 비폭력주의’로 이런 아편을 팔장낼 수 있을까?

진정한 맑스주의는 폭력을 찬양하지 않았다

맑스주의도 비폭력을 꿈꿔 왔다. 이 점이 의심스럽다면 레닌의 《국가와 혁명》을 한 번 훑어보라. 러시아의 1917년 10월 혁명은 당시 페트로그라드 주재 서방측 대사들의 적대적인 증언에 따르더라도 희생자가 기껏해야 열 명밖에 안 됐다.

이 봉기를 지도한 레닌과 트로츠키(당시 페트로그라드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는 불필요한 인명살상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하라고 적위대원들에게 신신당부했다. 정부 청사 공격에 앞서 트로츠키는 수도방위사령부 사병들에게 선동 연설을 먼저 한다.(이 장면은 존 리드의 《세계를 뒤흔든 열흘》에 묘사돼 있다.)

러시아 혁명은 총이 아니라 말로, 주장과 설득으로 승리했던 것이다. 말은 매우 과격했고 격렬했다. 하지만 이 언어 ‘폭력’은 진정한 폭력에 견주면, 특히 거의 1천만 명의 인명을 앗아가고 있던 제1차세계대전에 견주면 새 발의 피였다.

휴머니즘은 맑스주의와 러시아 혁명의 본질적 요소였다. 소위 ‘폭력 혁명’은 비폭력 사회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이었다. 피억압 민중의 반대편에서 피억압 민중을 향해 비폭력을 설교했던 러시아 임시정부 총리 케렌스키는 제1차세계대전 참전을 멈추지 않았고 전선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사병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설득

혁명 후 러시아에는 내전(1918~21)이 도래했다. 폭력 사용이 증대했다. 하지만 이 때조차 불세비키는 폭력보다 주장·설득에 의존하려 애썼다. 트로츠키가 이끄는 적군은 훨씬 우세한 화력을 가진 영국·프랑스·미국 등 14개 외국 군대와 이들의 지원을 받는 백군에 맞서 백군 사병들의 의식에 호소했다. 트로츠키의 선동 연설을 들은 오데사 주둔 프랑스 해군 사병들은 불세비키에 맞서 싸우기를 거부했다. 폭력을 예방한 비폭력의 승리였다.

서구, 특히 독일 혁명의 패배로 러시아 혁명이 고립되자 1920년대 중엽부터 러시아 관료는 주장·설득과 폭력 사이에서 점점 균형을 잃어 갔다. 스탈린주의 관료는 맑스주의로부터 휴머니즘적·해방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고전 맑스주의는 노동자 다수파가 지배자 소수파를 억압하는 것이 혁명이므로 노동자 국가 하에서는 폭력 사용이 최소한에 그칠 것이고 매우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920년대 말 이후 서방 열강들과 자본 축적 경쟁에 돌입한 소련 스탈린주의는 국내 노동자·농민의 피와 땀을 쥐어짜기 위해 비폭력적 사회에 대한 고전 맑스주의의 이상을 휴지통에 처넣어 버렸다.

스탈린주의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맑스주의적 비폭력론이 집약돼 있는 고전 맑스주의의 점진적 국가 사멸 이론(무계급·무국가 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 국가인 노동자 국가는 점점 제 구실을 못하고 쇠퇴해 마침내 없어지게 된다는)을 분쇄 했다.

스탈린은 맑스와 레닌의 점진적 국가 사멸 이론을 배격하고, 오히려 혁명 후 국가는 강화된다는 이론으로 대체했다.

이제 맑스주의와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그리고 맑스주의의 언어로 폭력 남용이 정당화됐다.

북한 스탈린주의 관료도 온갖 끔찍한 국가 폭력(예컨대 탈북자들과 사소한 범죄자들에 대한 가혹한 형벌, 동성애자 박해, 민주적 권리 억압 등)을 역시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굶주림은 일상이 됐다. 하루에 2만 6천여 명이 이렇게 죽어나간다

지배자들의 무능을 보여 준 식량안보 정상회의

사디 로빈슨
영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지난주 세계 지도자들은 로마에서 열린 UN 식량안보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이 회담은 식량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UN 식량농업기구(FAO)가 조직한 것이었다.

정상회의의 폐막 공동선언문에는 “2015년까지 굶는 사람의 숫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것은 그다지 야심찬 계획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목표를 실현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언문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애매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선언문은 UN이 “빈곤과 불평등을 제거할 정책들을 도입할 것이고 … 자연재해와 인재 들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목표를 이룰지는 적혀 있지 않다.

선언문에서 언급한 구체적 제안 중 하나는 65억 달러를 긴급 식량 구호 자금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식량 구호는 매우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단기적으로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선언문이 언급하는 구호 자금은 너무 적다. 미국 정부는 2006년에만 군사 작전 비용으로 5천2백90억 달러를 사용했다. UN 사무총장 반기문조차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매년 2백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식량 구호는 식량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식량 구호를 미끼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정상회의는 어떻게 빈국, 특히 아프리카의 식량 생산량을 늘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이것은 현재 위기의 원인이 식량 생산량 감소에 있다는 주장을 함축한다.

원인

일부 빈국의 식량 생산량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상회의에 참석한 일군의 정치인과 전문가 들은 그것의 진정한 원인 —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부국(富國)이 빈국(貧國)에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 을 말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시장이 확산(또는 강요)되면서 가난한 농민들은 갈수록 세계 식량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됐다. 그들은 엄청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부국의 농민들과 경쟁하는 불리한 처지에 빠졌다.

가난한 농민들은 농업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계, 농약, 비료와 관개 체제 등을 당해 낼 수 없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소농(小農)들을 토지에서 몰아내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당해낼 수 없는 가난한 농민들은 다른 일을 찾아 도시로 몰려갔다.

생산의 초점도 국내 소비용이 아니라 이윤 창출이 가능한 수출용 환금작물(換金作物) 재배로 이동했다. 이것은 식량 안보를 해쳤고 빈민들은 갈수록 세계 식량 시장에 의존하게 됐다.

그러나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이 존재한다. 세계 식량 생산량은 계속 증가해 왔고 올해 농업 수확량도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 정상회의의 선언문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20년 전보다 15퍼센트 더 많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20년 전보다 세계 인구가 15억 명이나 더 늘었지만 말이다.

일부 국가에서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는 미래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감소의 핵심 원인은 무역 자유화·보조금 부족·빈곤·불평등인데, 정상회의는 이것을 해결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 줬다.

더구나, 농업과 토지 사용의 변화는 식량 가격 폭등의 장기적 원인 중 하나일 뿐이다. 정상회의는 식량 가격을 올리는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바이오에너지는 많은 토지와 곡물을 식량 생산이 아니라 연료 생산으로 전환시키면서 현재 식량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정상회의는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금융투기, 석유 가격 상승과 달러화 약세도 식량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의는 이 원인들을 제거하는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 그것이 전 세계 농업 재벌들의 권력과 이윤에 타격을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식량 위기는 자본주의에서 식량이 생산되고 분배되는 방식 때문에 발생했다. 진정한 해결책은 세계를 부자와 빈자로 나누는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운하 계획은 빨리 접는 것이 대안입니다”



[편집자] 지난 대선 경선 당시부터 이명박의 대운하 계획을 날카롭게 비판해 온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홍종호 교수**를 만나 대운하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홍종호 교수는 정부의 운하 건설 예상 비용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반면 물동량은 과장됐다고 비판해 왔다. 정부 측 인사 중 누구도 이런 비판에 그럴싸한 반박을 하지 못해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이 홍종호 교수의 비판을 보도했고 유명한 과학 잡지인 <네이처>도 홍종호 교수를 인터뷰한 바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운하 사업 자체의 타당성보다 대운하 계획의 추진 과정 자체가 문제예요. 정책이 너무 부실하거든요. 무슨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한지 누가 추진하는지, 심지어 추진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국토해양부가 제일 앞장서서 대운하를 추진하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밖으로는 전혀 컨트롤타위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비판이 있니까 그냥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모습으로는 많이 궁색하죠.

대운하 정책 자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업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적·생태적 환경에 비춰 봤을 때 타당성도 전혀 없고 정당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경제학자들 대다수가 대운하 계획에 반대합니다. 운하의 본질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애초 운하 건설의 목적은 물류 운송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성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더는 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운하 건설을 추진하는 데는] 제 생각에 첫째로 리더십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한 공약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한 정책을 그냥 관둘 수는 없다는 거죠.

게다가 청계천도 그렇고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그렇고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밀어붙여서 성공한 사례도 있으니까요.

둘째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불황에 빠진 건설



‘미친 소’ 수입 반대 시위대의 대다수가 대운하에도 반대한다

업계를 활성화한다거나 지자체장, 그리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식이면 안 되죠.

청계천·경부고속도로 등과 현재 대운하 계획 사이에 유일한 공통점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추진했다는 대단히 표현적인 연계성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죠. 국가 예산이 1천5백억 원 정도 하던 시절에 4백억 원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 말이죠. 그러나 1960~70년대 도로 건설 사업은 세계적인 조류와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2년 반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실행하면서 피해도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도로가 부실해서 땀질하기도 했구요. 그래도 어쨌든 해냈습니다.

청계천도 어쨌든 덮여 있던 것을 뜯어내고 복원한 것 아닙니까. 회색빛 도시에 친수공간[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냈으니 싫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운하는 다릅니다. 운하라는 운송수단은 예전에 노새가 강둑에서 배를 끌고 다니기도 했을 정도로 오래 전에 사용되던 운송 수단입니다. 그리고 청계천은 사람들이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곳이지만 대운하는 배를 띄우는 것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특히 요즘 학생들 말로 하면 컨셉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리더십을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좋겠다고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우주개발·해저개발 한다고 하면 그나마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서 관심이라도 끌 수 있겠죠.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도 하천개발 사업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대운하 사업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

겠냐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국책 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1970~80년대에 사용하던 경기부양책을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금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국책 토목 공사를 벌이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물가도 폭등할 것이구요.

따라서 성장 위주 정책보다는 안정 위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런 합의가 이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논리는 더는 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뭐냐는 물음도 있습니다.

우선 무엇에 대한 대안인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물류혁명을 통한 국운 융성’이라는 정부의 슬로건이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정말로 물류를 위해서라면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류는 크게 도로·철도·항공·바다 운송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무조건 도로 건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철도나 바다운송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더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KTX를 이용하면 부산에서 짐을 부쳐서 서울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5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왜 며칠이나 걸려서 운하를 타고 운송해야 합니까?

그리고 일자리, 지역개발, 수질 개선, 수량 확보, 하천 정비, 지구온난화, 관광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물론 이런 조치들은 필요한 목표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데 운하가 최선이나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운하로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각각의 목표에 대한 대안들은 있습니다. 특히 관광은 건설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관광업을 발전시키는 데 운하가 최선입니까? 게다가 수질 문제나 수량확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여러 학자들이 생태적 대안도 많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운하 하나로 수렴시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대운하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전에 저한테 한 아이의 어머니라며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아이에게 파괴된 국토를 남겨 주고 싶지 않라며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첫 삽을 뜨는 날 바로 그 앞에 드러눕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대운하 계획을 고집하면 지금 거리에서 벌어지는 운동 이상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하 계획은 빨리 접는 것이 대안입니다.

인터뷰 · 정리 장호중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국책 토목 공사를 벌이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만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증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편지

letter@counterfire.or.kr

지면 관계상 실리지 않은 독자편지나 소식/보고는 온라인에 실립니다.

6월 16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편지를 환영합니다

한 달 이상 계속된 촛불집회의 생생한 경험이나 이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을 <맞불>에 보내 주세요. 개인적으로 느낀 것도, 경험

한 것도, 같이 참가한 지인들과 나눈 이야기 등 어떤 것든 환영합니다. <맞불>은 정부의 촛불집회 비난, 조종 등의 왜곡 등에 맞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적인 언론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맞불>에 직접 실어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와 의견을 기

다리겠습니다.

letter@counterfire.or.kr로 이메일을 보내 주거나 <맞불> 웹사이트(<http://www.counterfire.or.kr>)의 '독자편지 쓰기' 탭을 클릭하세요.

촛불의 바다에서 온 편지



행진 인솔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별한 단체에 소속되거나 활동을 하지는 않는 시민입니다. <맞불> 90호의 '촛불시위의 잠재력과 과제'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자생성과 의식성에 관한 대목을 읽다가 생각난 제 경험이 있어 독자편지를 씁니다.

저는 촛불 집회에 때로는 혼자, 때로는 유치원생 아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지금이야 거리시위에 자연스럽게 동참하지만 5월 중하순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회에 가면 부모들은 아이의 안전 때문에 보통 소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특정한 소속단체 없이 홀로 참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뻔뻔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인솔자 없이 어수선하게 진행되다가 흩어지곤 하던 시위

초반, 저는 시위에 조금 참가하다가 말곤 했습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참가할 때는 더욱 일찍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행진이 충분히 안전한지 — 즉, 대열을 누군가 책임지고 인솔하는지, 그리고 대열의 규모가 충분히 큰지 등을 따져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저뿐 아니라 가족 단위로 참가한 꽤 많은 참가자들이 보여 주었습니다.

자신감

5월 말, 거리시위와 관련해 시민들의 자발성을 다함께가 해진다는 비난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이 있은 후 열렬적이게도 저 같은 소극적인 참가자들은 좀더 자연스럽게 시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행진을 인솔하고 책임진다는 점은 적극적인 소수에게는 방해가 될지 모르지만 소극적인 다수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더 자연스레 참가하게 됐고 행진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진 규모는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분노나 반감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지만 자신감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을 형성하고 계속 유지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함께의 노력은 소중한 것이고, 앞으로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호외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건승을 바랍니다.

무소속 시민

자멸의 장벽, 광우장성

6월 10일, 2005년 APEC 반대 시위대로부터 부시를 보호하기 위해 어청수 경찰청장이 고안해 냈다는 컨테이너 바리케이드가 또다시 등장했다. 나의 카메라 렌즈로 들어온 수많은 낙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한 글귀를 보고는 그만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바로 '狂牛長城(광우장성)'이었다.

광우장성이란 말처럼, 이 컨테이너 바리케이드는 성난 국민들로부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사수하고, 국민들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 주는 상징물이 아

닐까 한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이명박의 기상천외한 소통 방식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바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만들었던 만리장성은 결국 내환의 단초를 제공해 진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하물며 자국민을 가로막겠다는 세워 놓은 이 흉측한 장벽이 이명박 정부에게 어떠한 결말을 가져다 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절벽 아래로 다 이빙을 스스로 준비중인 이명박 정부에게 미리 조의를 표한다.

이선욱

반이명박 투쟁에 공무원 노동자가 더 적극 나서길

이명박에 대한 반감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공무원 노동자들의 주요 대화 주제는 '이명박 씹기'다. 내가 아는 공무원 노동자는 6월 10일 연가를 내고 서울시장에 간다고 얘기 했다.

공무원·교원 노조는 10일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독단과 폭력을 계속한다면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일

선현장에서는 반국민적 정책을 고발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것"을 선언했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며,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의 정책을 '시행'해야 할 공무원 노동자들이 그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파업을 하고 거리로 나선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는가.

곽태진

6·10 집회 단상

6·10 집회 때 철도노동조합에서 간이 화장실을 7개나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라는 화장실의 문구도 재미있었습니다.

이명박이 광화문, 시청, 종각역을 무정차하도록 지하철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노동조합에서 이를 막았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서울메트로에 항의 전화를 했는데 너무 많은 전화를 받은 탓인지 '무정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네요. 지하철 노동조합에서 촛불시위 참가자를 위해 야간 운영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싶어 여러 가지 손팻말을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이명박 OUT'이 써진 것도 있냐며 자기 동네에 붙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촛불시위에 참가해 오후 6시에는 강남역에 사람들이 없었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위박이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



굶어낸 신경 속에 묻는 신경질

나는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있다. 고통은 마취주사로 해결할 수 있지만, 치료비에 놓아줄 마취 주사는 세상에 없는 것 같다.

처음에 보험 적용이 돼 총 비용이 3만 원이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다. 그렇

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는 '신경을 굶어내는 것'까지였다. 치 신경이 제거되면 치아가 절반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형물을 씌워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단다. 결국 나는 38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잇몸치료까지

합하면 총 금액은 47만 원에 달한다. 내 월급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이다.

무료 베타[시험판]로 유저[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유료화하던 술한 온라인 게임의 상술을 건강보험에서 느낀다.

덕분에 의료보험 민영화가 무

엇을 뜻하는지도 좀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안 그래도 엉성한 보험마저 삼성 같은 기업에 내맡기겠다는 것이 그 실체일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내가 받은 '혜택'마저 부러워할 미래의 누군가가 생겨날 것이다. 그것은 나이 먹은 내가 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미친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빈

굳이 '인터넷 페인'이라고 말해야 했나

기사의 맥락은 이해하지만 [〈맞불〉 90호, '현 촛불 시위의 잠재력과 과제'에 나온] '인터넷 페인'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삼성같은 재벌 회사들에 항의 전화를 하자고 호소했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조합의 광우병소 운송 저지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도 네티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노동자 파업의 방아쇠 노릇을 했습니다. 인터넷은 가상공간이 아니라 저항과 투지를 보여 주는 장입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이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고 실제로 네티즌들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탄압하고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으로부터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명박의 '인터넷 종량제'도 함께 막아야 합니다.

아름다운인생

'자발성주의자' 비판에 대해

<맞불> 90호 '현 촛불시위의 잠재력과 과제'에서 최일봉 씨의 '자발성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의 맥락은 지지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비판인지 의문이다. 일부 '자발성주의자들'의 태도는 가두행진의 열망이 표현됐던 초반에 나타났던 문제였다.

24일 첫 가두행진이 있었을 때, 공식적인 행사가 끝났음에도 수 백명이 도로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유발언을 하려는 김새만 보여도 야유를 보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비민주적 태도의 발로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이명

박을 끌어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원했다.

투지

내 옆에 있었던 한 여성은 내가 보기에 기력이 다해 곧 쓰러질 듯한 몸으로 "이명박 탄핵"을 연호했고, 경찰의 계속되는 해산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신념으로 투지를 불태웠다. 나는 이 용감한 여성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최일봉 씨가 예로 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방송차의 마이크를 뺀 따위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뒤로 돌아서 다시 행진을 하자'고 한

주장은 단순히 일부 시위자들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다.

마이크를 뺀 행위는 사회단체의 개입이 시민의 자발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대책회의가 행진을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시위자들의 일부가 '단체'에 대해 반감을 보일지라도 이를 '자발성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한 듯 보인다. 최일봉 씨가 비난한 사람들 중에 일부 시위자들은 모순되게도 민주노동당 화물연대의 광우병소 수입저지 시위는 옹호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구태옥

FTA의 문제점을 아고라에 올려주세요

지금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여론 조사를 보면 찬성쪽이 좀 많더군요. 그런데 그분들이 FTA의 내용을 알고 여론조사에 응답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저도 FTA가 되면 서민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왜 힘든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네요. 또 정부의 6퍼센트 성장, 35만 개 일자리 등의 구호에 혹하기도 하고요. 인터넷을 뒤져 자료를 찾아도 너무 어렵더군요. 아고라에 왜 한미FTA가 서민한테 불리한지 올려 주세요. 아줌마들도 학생들도 거부감 없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올려주세요.

진정 '없이 사는 사람'도 먹을거리, 잡자리, 병원가기 걱정없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김철원

'다함께'에 보내 주신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다함께에 지지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오고 계십니다. 호외와 손팻말 제작에 사용하라고 지지금도 보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희망이다"는 메시지를 보내 주시기도 합니다.

시위 현장에서도 지지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함께가 발행하는 주간 신문 <맞불>을 구입하면서 잔돈을 받지 않거나 5천 원이나 1만 원을 내며 구입하는 분들은 미처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외에도 먹을거리를 한가득 주고 가

는 시민, 고유가 시대에 귀하다 귀할 주유상품권 10만 원어치를 주고 가는 시민도 계십니다.

다함께가 나눠드리는 <맞불> 호외와 '이명박 OUT' 손팻말은 시위 현장의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다함께 회원들이 호외와 손팻말을 시민들에게 나눠드릴 때 어느새 처음 보는 시민들이 다가와 함께 나눠주는 모습을 이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무료로 나눠드리는 호외와 손팻말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일절 받지 않는 다함께가 지금까지 수십만 장의 <맞불> 호외와 '이명박 OUT' 손팻말을 나눠드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촛불시위 현장에서 매호 수천 부가 판매되는 <맞불>이 이제는 매호마다 찾는 분들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불>은 반이명박 투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문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맞불〉을 보며 그

동안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됐고, <맞불>이 주장하는 촛불시위의 방향처럼 해야 한다"며 정기구독을 신청하셨습니다. 또한 시민은 <맞불>의 주장에 지지를 보낸다면, 지지금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지면에 다 심지 못할 정도로 시민들의 다함께에 대한 지지와 성원의 사례는 많았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함께는 앞으로도 반이명박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울 서부 사회포럼

어게인 1987 — 촛불 운동은 어디로?

연사: 김하영('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6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신촌 아트레온 극장 14층 토즈
문의: 010-5232-1905, 016-785-4957
참가비: 2천 원

서울 중부 사회포럼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배운다 — 촛불 운동은 어디로?

연사: 최일봉('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6월 1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종로 5가 이화예식장 옆 임호빌딩 701호
문의: 010-2519-1987,
http://blog.naver.com/atgibforum
참가비: 2천 원

※ 추가된 포럼은 '다함께' 웹사이트 (http://www.alltogether.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포럼 안내 및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으로 연락 주세요.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 봐 주세요.

http://www.alltogether.or.kr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함께'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과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국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였던 '투쟁상블'(Tous Ensemble)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함께'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아래의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조종동 같은 기성 언론은 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우리가 흘려진 개인이자 부당한 권력에 맞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주간 <맞불>을 발간하고,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또한 거리와 대학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대중 행동을 함께하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효과적 전략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셔서 여러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함께합시다!



물류를 마비시켜 이명박을 저지하자

강동훈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90.8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하고, 운송료 인상, 표준요금제[정부가 운송원가를 반영해 운송료의 최저기준을 제시하는 제도] 시행, 경유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6월 13일에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울산의 현대 카캐리어, 창원의 한국철강 그리고 화물연대 전북·충남·광주·포항지부 등은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레미콘·덤프 노동자들도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한국노총 레미콘·굴착기 노동자들도 16일부터 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용불량자

이 파업은 커다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이미 시작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시작된 파업에 상당수 비조합원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요 포털 사이트와 운수노조 홈페이지에는 화물연대 노동자를 지지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운수노조는 바로 얼마 전에도 ‘미국산 쇠고기 운송 거부’를 결의해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화물 노동자들은 경유가 폭등 때문에 약 4분의 1 정도가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와 화주들은 모든 부담을 화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힘이 빠지고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대중적 지지를 받는 이때에

정부와 화주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한다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2003년 5월에 화물연대가 정부와 화주·고용주에 맞서 통과한 승리를 거뒀던 방식을 다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 승리의 열쇠는 항만 봉쇄, 도로 점거 등으로 물류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당시에 노동자들은 부산의 주요 부두,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 물류의 심장과 동맥을 봉쇄했다. 2만여 명의 화물연대 노동자가 20만 대의 화물차 운행을 막

는 과단성 있는 행동에 정부는 완전히 굴복해야 했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물류를 마비시켜 나라를 결단낼 수 있는 강자들”이라며 두려움을 나타낸 바 있다. 혹시 6월 13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의 일부 양보를 받고 투쟁을 끝내는 안 된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표준요금제 도입을 약속했다가 화물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쳐 왔는데,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그것은 곧 이어질 다른 노동자들 투쟁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

를 위해 현장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정부와 협상에 매달려 화물 노동자들의 힘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화물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집결해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위력을 과시하고 항만 봉쇄, 도로 점거 등에 나서야 한다. 철도·항만·항공 노동자들은 대체 운송을 거부하며 연대해야 하고, 민주노총도 파업 찬반 투표가 완료되는 대로 전면적인 파업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내지르자 다들 동참하고 있어요”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을 만나 이번 파업의 의의와 앞으로 투쟁 방향에 대해 인터뷰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7년 동안 날이 갈수록 삶이 더 열악해졌어요.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경유가가 1천8백 원을 넘으면 이 중 50퍼센트를 보조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미 사업장 별로 싸우고 교섭하면서, 경유보조금 기준가를 1천4백~1천5백 원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준가 1천8백 원을 말하니 사실 싸움을 부추기는 거죠. 정유사의 폭력에 대해서도 이명박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정유사들이 합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가 가격 규제에 나서고, 국영 에너지 기업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기름값도 훨씬 낮아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화물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운임 제도 문제입니다. 단단계 알선 구조, 화주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화물 노동자들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경유 가격 폭등은 뇌관이고, 오히려 근본적 문제가 응축돼 있다가 폭발한 거예요. 근데 경유 가격 때문에 화물연대 조합원뿐 아니라 대다수 비조합원들도 적자 운행으로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차들

이 다] 설 수밖에 없죠. 또 화물연대가 내지고 있으니 다들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2007년 철도·화물 공투할 때 정부는 표준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어요. 근데 올해 5월 8일에 정부에 ‘합의 사항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못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급해지니까 다시 하겠다고 해요. 우리는 당연히 믿을 수 없죠. 화주 단체들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표준요금제를]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고 있어요. 화물 노동자들이 그만큼 급해서 첫 스타트를 끊었죠. 같이 해서 더 큰 힘을 내도록 노력할 거고, 그러면서 더 많은 성과를 쟁취하고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 받도록 투쟁할 겁니다. 적극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맑·시·즘·2·0·0·8 은 저항운동의 토론 광장이자 축제입니다.

50여 개의 강연과 영화 상영·콘서트·사진전·시 낭송 등이 어우러질 것입니다.

광우병 쇠고기와 한미FTA,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물·전기·가스 민영화 등을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른 세계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장입니다.

맑시즘2008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열띤 토론과 감동의 공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요 연사

조너선 널 미국 출신 반자본주의 운동가. <미국의 베트남 전쟁>(책갈피) 저자
이언 버철 68 반란 참가자. 영국 미들섹스대학교 프랑스학 교수

강기갑 민주노동당 재선 국회의원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이강택 ‘KBS 스페셜’ PD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연출

김수행 맑스주의 경제학자. <자본론>(비봉) 번역 정성진 맑스주의 경제학자,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이희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이슬람>(청아) 저자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 강양구 <프레시안> 과학·환경 담당 기자

<맞불>과 ‘다함께’를 후원해 주세요

‘다함께’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일절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지지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다함께는 이명박 반대 시위에서 호외, 손팻말과 스티커를 대량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진실과 저항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정성을 모아 주십시오.

※ 후원계좌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694701-01-227958 / 하나은행 197-910005-87207 / 우리은행 1002-130-549338 / 신한은행 308-12-498840
웹사이트(www.alltogether.or.kr)에서 핸드폰결제·CMS신청도 가능합니다.

일시_ 8월 14일(목)~17일(일)

장소_ 고려대학교

주최_ 다함께

참가문의_ 02-2271-2395,

atgmail@nate.com, http://www.alltogether.or.kr

저·항·운·동·의·축·제

다
함
께
2008